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차태준

수험 번호

제 [] 선택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봅니다.

학생: A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데 B에서는 정치로 보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 (가) 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 ① A는 시민 단체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② B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B에 비해 A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가)에는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

2.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갑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형태이다.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에 B당, t+1 시기에 A당이며,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 t+1 시기에 모두 b당이다. 갑국과 을국의 시기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은 다음 표와 같다.

시기	갑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을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A당	B당	C당	a당	b당	c당
t	45	30	25	15	65	20
t+1	55	25	20	55	30	15

- ①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 ②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 ④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을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⑤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을국에서는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했을 것이다.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자유권과 사회권 중 하나임.) [3점]

행복 추구권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권리인 A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추구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B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 ①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② A와 달리 B는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권리이다.
- ③ A와 달리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B와 달리 A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 ⑤ A, B 모두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4.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 법률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 ② 을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갑의 관점, 을의 관점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⑤ 법치주의는 역사적으로 갑의 관점에서 을의 관점으로 변천해 왔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임.)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A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B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을 의결한다. 조례안이 B에서 의결되면 B의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A에게 이를 이송해야 한다.

- ① 주민에게는 ㉠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A와 달리 B의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③ B의 의장과 달리 A는 주민 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B는 A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⑤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④ 지문

	갑국	을국
t	연립내각	여내각
t+1	단독내각	여소야대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인 A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통일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B가 나타난 것이다.

- ① A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의제에 따른 국가 의사 결정을 강조한다. : ~~상관 X~~
- ② B의 실현 방안으로 ‘보통 선거 실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들 수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이 해당~~
- ④ B와 달리 A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규제 정책의 근거가 된다. : ~~북미 국가의 원리~~
- ⑤ B와 달리 A는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 ~~문화 국가의 원리~~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에게는 자녀 을(18세), 병(14세)이 있다. 을은 A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주의로 손님 B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장기간 여행을 간 친구 C의 부탁으로 맡고 있던 C의 반려견을 데리고 혼자 산책하던 중, 갑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행인 D를 물어서 D가 다쳤다. 그동안 집에 혼자 있던 병의 부주의로 인해 창틀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E가 다쳤다.

- ①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과 A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A가 을의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A는 B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는 C가 아닌 갑에게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라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병은 E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의 후보자로 지명된 갑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C가 갑을 B로 임명하면 갑은 C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게 됩니다. 한편 갑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D의 장(長)을 지낸 바 있습니다.

A: ~~국회~~ B: 국무총리 C: 대통령 D: 감사원

- ① B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 및 처분권을 가진다.
- ② D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③ A는 C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④ D는 B의 소속하에 있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⑤ A는 B의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갑의 항소는 기각 되었고, 이에 갑은 상고하였다. 갑은 상고심 계속 중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A는 이를 기각하였고 갑은 B에 (가) 을/를 청구하였다. B는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A: 대법원 B: 헌재 (가) 위헌심사청헌법소원

- ①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A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③ B는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부칙 DD 조항~~
- ④ A와 달리 B는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 ⑤ B가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A의 제소가 필요하다. ~~국가의 재소~~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25세)은 을의 지갑을 절취하던 중 적발되어 사법 경찰관에게 쫓기다가 열쇠가 꽂힌 채 길거리에 주차된 병(20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병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타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지 않기 위해 갑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갑에게 부득이하게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갑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갑의 고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병은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당방위~~

- ① 갑에 대한 구속은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구속 영장 발부 전 갑에 대한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해당함~~
- ③ 갑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범행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판결 확정 기간~~
- ④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체 관련만 가능~~
- ⑤ 검사는 병의 갑에 대한 상해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지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1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선거를 앞두고 □□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 △△ 학회에서는 포럼을 개최하여 □□ 복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책 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 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 복지 정책을
 결정·시행하면, ㉣ 그 결정·시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 평가를 반영하여 □□ 복지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 기>

㉠ ㉠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은 정치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은 정치 과정에서 **환류**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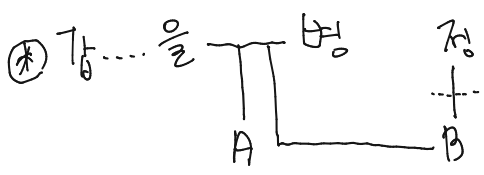
A는 국제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로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불신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 간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B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들은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 선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② B는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③ A와 달리 B는 국제 관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④ B와 달리 A는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A,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과 을은 불화가 심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을은 병과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서 A가 태어났고 5년 후 을과 병은 친구 정 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을과 병은 A, B에 대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고, A가 21세, B가 17세일 때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① 을이 병과 결혼하기 전 갑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친양자 입양 후 정과 B의 친족 관계는 **종류되지 않는다.**
 ③ 입양된 B는 을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을의 사망 시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⑤ 을의 사망 시 A와 B에 대한 친권은 병에게 있다.



14.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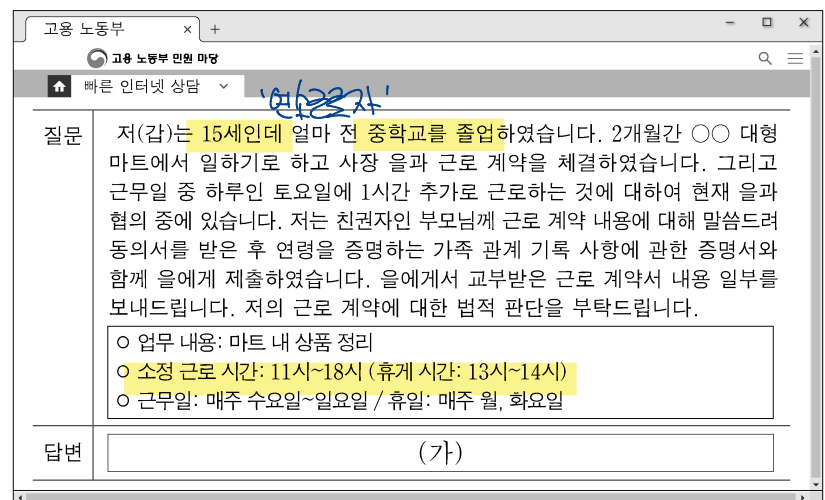
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은 일반 시민의 법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의 법익을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이때 일반 시민의 법익 보호라는 기능을 위해 범죄인의 인권 보장이라는 기능이 무시될 수 있어 두 기능의 균형이 요구된다. 형법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범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위한 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은 법정형을 넘어서는 형벌권 행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하는 등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형법의 기본 원리가 (가)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적정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보 기>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 의회에서 적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된다. : **실질, 형식 형법 모두 가능**
 ㉢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우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우익의 의미 X**
 ㉣ 법관에 의한 법의 해석·적용뿐 아니라 입법자에 의한 입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5.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의 친권자가 갑의 근로 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됩니다.
 ② 을이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③ 갑은 연소 근로자로 일요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④ 갑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을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갑이 을과 합의하에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전동 키보드를 구입하는 계약을 병(34세)과 체결하였다. 또한 갑은 정(40세)의 가게에서 고가의 태블릿 PC를 구입하기 위해 ㉠을의 이름으로 된 동의를 정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정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 ① 병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②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병이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을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갑이 ㉠을 위조한 경우라면, 을은 갑이 정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이 유효한 동의서라면, 갑은 을의 동의가 있어야 정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7.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는 19세기 서양 근대 민법이 제정되면서 정립된 것으로서 개인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A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 기>

- ㉠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 ㉡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공공복리 원칙
- ㉢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계약 강행의 원칙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리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의 구성
 -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15인의 재판관은 B 및 C에서 선출되며 양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야 함.
- B의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 및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됨.
 - 임기가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지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C에서 매년 5개국을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함.

- ① A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② B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 ③ C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④ B와 달리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C와 달리 B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A: 국제사법재판소
B: 안전보장이사회
C: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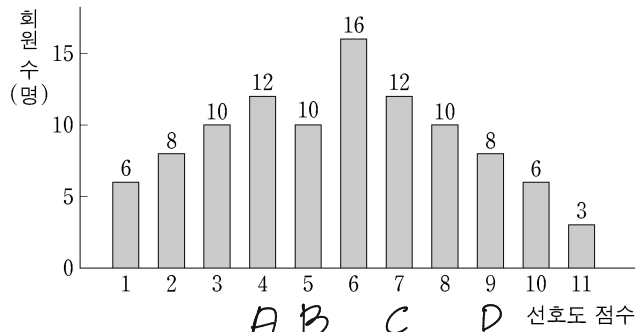
19.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는 B,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A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B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 ① A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B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
- ③ A와 달리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⑤ A와 달리 B, C는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표 선거를 앞둔 ○○ 단체는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이에 모든 회원 101명을 대상으로 환경 보호의 선호도(이하 '선호도'라 함)를 1~11의 점수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으며 가로축은 선호도 점수, 세로축은 각 선호도 점수에 해당하는 회원 수를 나타낸다.



대표 선거에 회원 A~D가 출마를 고민 중이며 이들의 선호도 점수는 A는 4, B는 5, C는 7, D는 9이다. 한편, ○○ 단체는 대표 선거 제도로 <1안>과 <2안> 중 하나를 채택하려고 한다.

- <1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 <2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됨.

모든 회원은 출마한 후보자의 선호도 점수를 알고 있다. 선호도 점수가 동일한 집단의 각 회원은 자신과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가 2명이라면 두 후보자는 해당 집단 전체 표의 절반씩을 얻는다. 단, 후보자는 자신에게 투표하며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 결선 투표 시 자신과 선호도 점수 차이가 가장 작은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회원들의 선호도 점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 ① <1안>에 비해 <2안>의 선거 제도는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 ② <2안>에 비해 <1안>의 선거 제도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③ A, B, D만 출마한다면 <1안>과 <2안>에서 당선자는 동일인이다.
- ④ A, C, D만 출마한다면 <2안>에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 간 결선 투표 득표수 차이는 10보다 크다.
- ⑤ A, B, C, D 모두 출마한다면 <2안>에서 A가 당선된다.

③ A, B, D만 출마 시 <1안> [A: 96: 96, B: 32, D: 93] <2안> [A: 62: 62, D: 99]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④ A, C, D 출마 시 <1안> [A: 46, C: 33, D: 22] <2안> [A: 46, C: 55: 55, D: 99]

⑤ A, B, C, D 출마 시 <1안> [A: 36, B: 13, C: 25, D: 22] <2안> [A: 46, C: 55: 55]

22 / 36